

與 “검찰권 남용·조작 밝힐 것” vs 野 “누가 외압 행사했나”

檢,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김병기 “기계적 항소 관례 고집 尹 구속취소엔 즉시항고 안 했다”

송언석 “檢, 직무유기·직권남용 李 대통령 완전무죄 만들겠다는 뜻”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장동 사건 1심은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사업의 실세였던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이 결탁한 부패사업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유동규 전 본부장은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만배 씨에겐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8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결과에 민주당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간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검찰이 이 대통령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이주희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에 대한 관련 공소를 취소하라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유죄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후 1심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항소를 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 결재까지 맡았지만, 이에 대한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가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 의혹은 정부의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논란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 담당 수사팀 일부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기자회견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즉시 검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

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개 민간업자들 앞에서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이라는 수사의 제1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치욕적 조치”라며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재명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고법 판결이 1심 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온실가스 감축목표·세법 개정안’ 논의

당·정·대 고위당정협의회

내주 최종 2035 NDC 유엔 제출 예정 세법 개정, 실효성 담보 조치 필요성

당·정·대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논의할 세 가지 안건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그중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후 위기가 일상의 재난이 돼 가고 있다. 폭우, 폭염, 산불, 태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35 NDC 최종 후보안으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유엔(국제연합)에 제출돼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질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여당 내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태홍 기자

3대 개혁 드라이브 속 당정 엇박자 우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9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검찰·사법·언론 등 예고한 3대 개혁에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임기 내 발생한 ‘당정 엇박자’로 당정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이에 동조하는 내란세력 척결을 약속하며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당원들에 호소했다. ‘진명(진이재명)’ 후보로 알려진 박찬대 당 대표 후보를 꺾은 정 대표는 정권교체 후 정부의 첫 당 대표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 대표는 “주석 귀경길에 검찰청 해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한 검찰 개혁 이슈 외에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권여당의 사법·언론 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 작업에 매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히 막혔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입법안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다만, 내란세력의 완벽한 청산과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는 정 대표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는 일이 많아 우려도 나온다. 또, 정부



·여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데, 정 대표가 쌓아올린 강경한 이미지와,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중도층에 소구력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중지법을 놓고 대통령실이 당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하는 등 당정관계의 긴장이 드러났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이 필요성을 제기한 재판중지법에 대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인 만큼, 잡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당 부산시장위원장 경선에서 탈락한 진명계 유동철 부산 수영지역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없는 컷오프”라고 반발했다. 유 위원장은 “정 대표가 ‘컷오프 없는 100% 완전경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당원의 피선거권과 선택권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공정하지 않은 면접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 모든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드리고 있으며, 부산시장위원장 선출 역시 이런 기조에서 치러졌다”며 “조강특위가 냉정할 정도로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태홍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비준 동의사항 아냐”

與, 野 ‘비준 대상’ 주장에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미관세협상의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논쟁을 두고 “관세협상이란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하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병기 원내대

표 기자회견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지금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비준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관세협상을 헌법 제 60조1항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비준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별도의 국회 비준 절차 없이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해 국회에서 처리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돼 인허가 관계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에는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를 할 것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의 11월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월 국회가 본회의를 두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